

공공부문 성희롱·성폭력 10건 중 8건 '학교에서 발생'

여가부, 총 922건 중 학교가 746건
공직유관단체 81건, 지자체 53건 등
교육부, 성폭력 고내 최다 발생에도
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교육 불참
"필수 아니고 자체적 교육 준비중"

'미투', '인하대 추락 사건' 등으로 미
흡했던 성폭력 예방이 지적됐지만 여전
히 고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
로 나타났다. 특히 공공부문 성범죄율
에서 학교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음
에도 교육부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
온라인 교육에 불참해 주목됐으며, 성
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도 낮게 평가
되고 있다.

◆교육부,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 육 불참... 자체 교육 진행 중

3일 여가부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
상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실시간
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. 교육에 앞서
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81개 기관,
859명이 참여 신청을 했다. 다만 81개
기관 중 정부 부처는 외교부, 국방부,
법무부 등 9개뿐으로 정부 부처의 절반

<폭력예방교육 이수율>

*자료기준일: '21.1.1.~12.31. (단위: %)

구분	국공립(39개교)				사립(155개교)				계(194개교)				
	교원	직원	교직원	재학생	교원	직원	교직원	재학생	교원	직원	교직원	재학생	
전체(194개교)	75.7	84.2	78.7	43.5	77.1	86.3	79.7	55.9	76.7	85.6	79.4	52.9	
교육 유형 별	성희롱	76.1	85.0	79.2	-	77.4	86.5	80.0	-	77.1	86.0	79.8	-
	성매매	75.6	83.9	78.5	-	76.9	85.9	79.4	-	76.5	85.3	79.2	-
	성폭력	75.7	84.2	78.7	43.7	77.2	86.5	79.8	56.3	76.8	85.8	79.5	53.2
	가정폭력	75.4	83.7	78.3	43.3	76.9	86.3	79.5	55.6	76.5	85.4	79.2	52.6

/자료=교육부

수준이다.

이 중 '미투운동'이 불거졌던 교육부
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신청하지 않은 것
으로 알려져 주목된다. 특히 교육부는
최근 여가부 점검에서 성희롱·성폭력
사건 81%가 학교에서 발생한다고 나타
난 바 있다.

더불어 여가부는 최근 제7차 여성폭
력방지위원회에서 심의한 19개 중앙행
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의 '여성
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(2020~2024)
2021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·평가 결과'

를 발표했다. 그 중 '공공부문 성희롱·
성폭력 방지조치 이행현황' 점검 결과
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
지 여가부에 집계된 공공부문 성희롱·
성폭력 사건은 총 922건이다. 이 중 학
교 등이 746건으로 압도적이었고, 다음
으로 공직유관단체 81건, 지방자치단체
53건, 국가기관 42건 순이었다. 여전히
교내에서 수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
음에도 교육부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
지 교육에 불참하는 모습을 보였다.
교육부 관계자는 "필수 교육이 아닐

뿐더러 앞서 관련 토론회, 설명회 등을
모두 참석했고, 교육부 자체에서 관련
교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
않았다"며 "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
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담당 직원보다는
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
더욱 강화돼야 할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◆성폭력 예방 교육, 실효성도 문제... 온라인 강의가 전부

교육부가 공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
결과 발표에서 대학 종사자들의 예방
교육 참여율이 81.2%였다. 다만 종사자
들은 예방 교육이 필수적인 경향이 있
어 교육 이수율이 높을 수 있고, 줄어들
지 않는 성범죄 발생 건수를 비교했을
때 실효성은 미지수로 판단된다. 한 대
학 관계자는 "종사자들의 경우 필수적
으로 성범죄 관련 예방 교육을 듣도록
돼 있기 때문에 다들 들을 것"이라고 말
했다.

하지만 같은 분석 결과에서 지난해
대학생들의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
53.2%로 저조하게 나타났다. '미투',
'인하대 추락 사건' 등으로 대학가 내
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됐음에도
관심을 갖고 예방교육에 임하는 대학생

은 반타작에 불과한 셈이다.

올해 4학년이 된 대학생 A씨는 "(성
폭력 예방교육을)학기가 끝나기 전 급
하게 듣는 경우가 많다"며 "따로 통과
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
적인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"고 말
했다.

대학종사자들과 달리 학생들은 성폭
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에서만 의무교
육 대상이기 때문에 성희롱 및 성매매
예방교육의 이수율은 미산출됐다. 사실
상 대학생들의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
시간은 더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할 수
있다.

예방교육 실효성 저조에 대해 묻자
교육부 관계자는 "그 부분은 공감하고
있지만 정책의 주체가 여가부이다보니
실행 주체(여가부)와 현장 교육(교육
부)이 갈리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질
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, 정책 수
단에 대한 고민이 많다"며 "학교 교육과
정 안에 양성평등 교육 요소를 담는 등
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
을 위해 교육 자체에 예방교육이 녹아
들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다"고 답했다.

/신한은 기자 godhe@metroseoul.co.kr

P코로나·도시개발 등 이슈 '시민들과 소통'

서울시, 시민도시 아카데미 운영 "심도있는 토론으로 궁금증 해소"

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, 미래
도시 이슈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자
이달 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'2022 시
민도시 아카데미'를 운영한다고 3일 밝
혔다.

올해 아카데미의 주제는 '대한민국
을 움직이는 7인의 도시철학 온라인 콘
서트'다. 도시계획 분야에서 저명한 7
명의 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▲역사도시
서울 ▲리모델링 ▲미래교통 ▲스마트
도시와 도시개발 등에 대한 이야기를
나눌 예정이다.

이번 강의에선 도시의 출발점을 되짚

어 보는 역사도시 서울부터 포스트 코
로나 시대 도시개발, 미래교통, 스마트
도시까지 주제를 확장하며 빠르게 변하
는 한국의 도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
슈를 살펴볼 수 있다.

도시의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'리모
델링'의 가치를 재조명해보고, 대도시
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점차 중요성
이 커지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생각해
볼 시간도 가진다. 이와 함께 서울시민
의 주생활(거주 문화)과 같은 독특한 주
제도 만나볼 수 있다.

시 관계자는 "강의 후에는 심도 있는
토론을 통해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
수 있다"면서 "아카데미에 참여한 시민
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'서울'을

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한다"고 말했다.

시는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제공한
다. 수강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
신청할 수 있다. 서울시 평생학습포털
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'도시 아카데미'
를 검색하면 된다.

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
과로 문의하면 된다.

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"배
움의 장을 통해 미래도시가 나아가야
할 방향을 시민과 함께 모색할 것"이라
며 "늘 익숙했던 우리 삶의 공간인 도시
를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이번 기회에
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
란다"고 말했다. /김현정 기자 hik1@



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'이태원 사고' 희생자 추모 공간에서 스님들이
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불경을 외고 있다. /뉴스IS

서울시 '이태원 블루' 심리치료 지원나서

정신전문의료 기관 225곳서 진행
보건소 홈페이지 25곳서 사전예약
유가족엔 대면·비대면 심리지원

서울시는 '이태원 헬러윈 참사' 이후
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심
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3일부터 관내
정신전문의료기관 225곳에서 특별심리
지원 서비스(우울·불안검사)를 지원한
다고 밝혔다.

특별심리지원 서비스는 사전 예약을
통해 받을 수 있다. 참여의료기관은 25
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
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.

또 시는 서울광장과 용산구 녹사평역
일대에 설치된 합동분향소 2개소 내에
'재난심리지원 현장 상담소'를 운영하
고, 25개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
안에 상담소를 마련해 시민 누구나 상
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유가족 대상으로는 대면·비대면 심
리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. 자치구 정
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유가족에게 도움
전화로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한다. 시

는 유가족 상담과 재난 위험성 평가를
거쳐 고위험군에 치료를 연계한다. 치
료 후 위험성 평가를 재실시하고 지속
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유가족들이 심리
적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
갈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.

부상자들의 경우 병원 내에서 정신건
강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협진을
활성화하고 마음건강검진 서비스 지원
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.

시민들은 이태원 사고로 발생한 신체
적·정신적 질병, 부상, 후유증 치료를
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.

이태원 사고를 직·간접적으로 목격
한 시민은 핫라인(1577-0199)과 정신
건강관련 온라인 플랫폼(국가트라우마
센터, 블루터치)을 통해 외상을 예방하
는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지원받을
수 있다.

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재난정
신건강위험평가와 상담을 거쳐 고위험
군으로 선별된 시민을 전문기관에 연계
하고 상담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라고
시는 강조했다. /김현정 기자

경기도 '깡통전세' 중개사무소 52곳 적발

업무정지 18건, 과태료 30건 등 조치

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
른바 '깡통전세' 인지 알면서도 중개행
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
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
사무소 52개소(58건)가 경기도 단속에
적발됐다.

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
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
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
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
18건, 과태료 30건, 경고 7건, 고발 5건
등(중복 포함)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.

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▲중개사무
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▲부
당한 표시·광고(허위매물 등) 9건 ▲소

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
고용해제 미신고 5건 ▲계약서 및 중개
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·날인 누락 3건
▲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▲직접거래
및 쌍방대리 1건 ▲기타 26건 등이다.

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팔달
구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
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, '깡통전
세 매물'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
려운 걸 알면서도 '안전한 물건이니 걱
정하지 않아도 된다'고 속여 10여 명과
중개 거래를 했다. 이후 해당 매물이 압
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
법적 우선순위에 밀려 전세보증금을
변제받지 못하게 됐다. 이에 수원시는
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
다. /경기=김대의 기자 dykimi@

서울물재생시설공단-경기대 공동연구·기술교류 맞손

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지난달 27일
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,
기술교류, 인적자원 양성 등을 위한 연
구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.

협약의 주요 내용은 ▲물재생센터현
안 해결 및 혁신을 위한 공동 연구 ▲현
장 맞춤형 인재 양성 ▲물산업 인재 발
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
개발·운영 ▲학술자료, 최신 기술정보
상호 교류 등이다.

박상돈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
"지속적인 물재생 분야 연구개발과 신기
술 발굴을 통해 물재생 기술의 선도 기관
으로 자리매김할 것"이라며 "이번 협약으
로 계기로 양 기관이 물재생 분야 기술과
물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
나가기를 바란다"고 말했다. /김현정 기자